

국회 파행에 제주 법안 논의도 '삐걱'

여야 강경 대치로 4월 임시국회 '개점 휴업' 이어가
4·3 배보상 정부안 조율 필요... 관련 논의 5월 국회로
23일 행안위 법안소위 개최에도 제주 법안 논의 안돼

4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을 이어가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논의는 5월 임시국회를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계류 중인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논의된 상태다. 4월 임시국회는 지난 8일 소집됐

으나 25일까지 국회 일정을 수립하지 못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의 갈등에 이어 선거제개혁안 패스트트랙 여야 4당 합의에 반발하며 장외 투쟁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행안위 법안소위가 지난 23일 소방법 국가직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소위원장이 직권으로 열렸지만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은 심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법안소위에서 정부

가 배보상 방식에 대한 안을 가져오면 재논의로 한 만큼 부처 내 논의 시간도 필요한 상황이다.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식이 있지만, 정부 부처 내 조율이 필요한데 그레도 5월 중에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추경안이 정국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지도 주목된다.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야당은 모두 부정적 입장이나 추경 내용이 미세먼지·안전 관련인 만큼 한 국당도 추경 심사에 결국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은 2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전지역 조례' 개정 재시동... 찬반 격론

도의회, 보류했던 조례 개정안 다시 발의 앞뒤 토론회
"보전지역 제대로 정비" "경제상황 고려해야" 의견 맞서

제2공항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철회를 촉구하면서 발의가 보류된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이 5월 임시회에 앞서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일부 도의원들은 개정안에 서명해놓고도 이후 논란이 제기되자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임시회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5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오는 5월 16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제372회 임시회에 앞서 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연도시 C&D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2공항과 보전지역'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현행 보전지역 관리 조례는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돼야 할 보전지구 1등급에서조차도 항만·공항과 같은 대규모 시설을 허용해 보전지역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조례개정안은 타당하지만 개정안 작성 시 의도적으로 항만과 공항을 제외하고, 도시사의 위헌·위법 조례라는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돼 도입 갈등을 증폭시켰을 뿐"이라며 "보전지역을 도입한 목적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공문화 과정인 제372회 임시회에 앞서 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연도시 C&D 대표는 이날

에 국한해서만 규제하다 보니 곳자율은 2등급에 해당돼 법적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된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개인도 아니고 정작 제주도가 절대보전지역과 동일시되는 지역에 대해 제대로 정비하겠다는 것마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고규진 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 사무처장은 "제주지역 건설업의 2018년 수주현황은 2016년과 비교해 52% 급감해 건설업체 도산과 고용 감소로 이어지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리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제주 경제도 종합 판단해달라"며 조례 개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부석현 제주도관광협회 조사연구실장도 "최근 개별관광으로 전환, 숙박업소 급증 등으로 여행업체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2공항은 도민들도 여유롭고 안전하게 육지와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도지사, 폐기물 줄이기 노력해야"

'제주 자원순환 기본 조례' 강성민 도의원 대표 발의
자원순환계획 수립 등 규정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도지사로 하여금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폐기물처리부담금의 용도를 규정할 조례가 발의됐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시행됐지만 제주도가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촉진해 환경보전하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곤란 시 최대한 에너지 회수 등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지사,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행정지원 ▷폐기물처리부담금의 징수고부금의 용도 및 활용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자연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에게는 과대포장을 억제하게 하면서 도민들도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이 가능하도록 소각이나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부담금을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 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6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가 심사해 본회의 심의를 거치면 곧 바로 공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표성준기자

가격 하락 올상 '제주광어' 군납 확대

도, 축제 지원 등 소비 촉진

최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광어 양식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가공품 군납 확대와 광어축제 지원 등 제주광어 소비촉진 시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수 소비의 촉진을 위해 제주국제공항 화이트칼라 홍보를 통해 도·내외 관광객들에게 제주광어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한 잠재적 고객인 대학생들에게 제주광어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대학축제 시 광어회·광어초밥·광어 어묵을 비롯한 광어식품 마케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제주광어 대축제'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명품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제주광어 소비촉진 시책으로 양식 광어의 군납사업도 확대·추진함으로

써 기존 활어 위주에서 가공품 유통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식 광어 군납물량은 지난해보다 84t 증가한 198t을 확보했으며, 제주도는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군납용 가공비 65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제주광어 출하가격은 지난해 7월 kg당 1만2194원이었지만 올해 1~2월에는 8500원~9000원까지 하락했다. 최근에는 양식어가와 어류양식수협, 제주도 차원의 제주광어 가격안정화 대책 등의 시행으로 4월 25일 현재 1만원까지 가격을 회복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청와대 새 대변인에 고민정 부대변인

역대 최연소 대변인 기록
2개월여만에 초고속 승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임 청와대 대변인에 고민정 부대변인(40·사진)을 승진 임명했다. 만 39세 역대 최연소 대변인이다.

KBS 아나운서 출신(2004~2007)의 고 대변인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실 선임행정관에 임명됐고, 지난 2월에는 부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부대변인으로 임명된지 2개월여 만에 대변인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신임 고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참모 중 한 사람"이라며 "그동안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뛰어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 신임 대변인을 임명한 데에는 대변인 업무 연속성과 젊은 여성 인재 중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부미현기자



FTA대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19년 『제8기 농업성공대학』 수강생 모집

「제8기 농업성공대학」

농업성공대학은 농업인들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제주시와 농협제주시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평생교육과정」입니다.

개강일	교육기간	강의시간	참여농협
2019. 5월중순 (농협별 일정에 따름)	5월중순 ~ 11월말 (25주, 50시간)	17:00~19:00 (매주 2시간)	10개

※ 참여농협 : 제주시, 조천, 함덕, 한림, 한경, 고산, 김녕, 구좌, 애월, 하귀

모집요강

1. 모집개요	인원	모집기간	모집지역	선발방법
	600명 (농협별 60명)	'19.4.22~4.30	제주시 (참여농협 관내)	자격제(농업인 경력제) 선착순

2. 지원자격 : 제주시(읍·면 포함)에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인경력제)
3. 지원방법 : 자필 입학원서 작성 후 해당농협에 제출
4. 수료자혜택 : 가) 행정기관 각종 보조사업 가점 부여
나) 각종 교육 우선기회 부여
5. 문의사항 : 해당지역 농협 지도팀(지도담당)

스마트팜 연계 감귤 직거래 사이트
www.감귤소랑.com

5월 오픈 예정

온라인 중개서비스

농민 ↔ 소비자

직거래로 농가소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한라SD · 010-6789-3234
스마트팜 설치 및 작물 납품 농가모집